

# 3야 “민주·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결단하라”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야3당 농성 지지 긴급기자회견에서 야3당 관계자들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앞 이틀째 농성... 민주당 집중 성토 정의당 '문대통령-5당 대표 회동' 촉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틀째 농성을 하며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동시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이들 3당은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내년도 예산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전날부터 철야 농성 중이다.

야3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연계 요구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집중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해야 한다”며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혁을 연계하는 일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우리는 선거구제 개혁이 아닌

선거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약속했고,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가야될 길’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움직이지 않고 있는 민주당이 움직이도록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평화당 장동영 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년 동안 예산과 선거제도를 연계시키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하는데 무지하거나 오만”이라며 “1989년 예산은 ‘5공 청산’에 연계해 투쟁했고, 1991년 예산은 지방자치 선거제도에 관련 선거법에 연계시켜 야당이 관철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991년 예산을 논의했던 1990

년 정기국회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해찬 대표였다”며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 대표는 “1993년 예산은 선거관리를 위한 중립내각을 관철했고, 가깝게는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과 사학법을 연계한 예산 보이콧 사례 등 예산 연계는 역대 야당의 의회 전략”이라며 “30년 간 22번 연계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내년 4월 선거구제 획정 시일을 앞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월 정기 국회 내 처리를 요구하는 야3당에, 예산안을 연계해 되지 않을 일을 한다는 식으로 비난을 일삼는 것이 집권정당이 할 일이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거대 양당이 합의 못해서 예산안 법제 시한을 넘겨 놓고, 곧바로 서 회의록 한 자도 남지 않는 ‘짬짜미’ 예산안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애먼 야3당을

비난하며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핵심 공약 수행을 위해 여기 앉아 농성해도 모자랄 판인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뒷짐을 지고 선거제도 개혁은 안 될 일인 것 처럼 부정적 기류나 퍼뜨리고 있다”며 “자기 당 공약을 자기 당 의원들이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을 몇개월째 방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처리 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은 하세월이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5당 대표를 전부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3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야3당이 전달할 예정이었던 서한을 직접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한국당 계파 갈등 다시 ‘꿈틀’

비박 ‘박근혜 탄핵 찬성’ 사과 요구에 난색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석방) 촉구 결의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차로 삐걱거리고 있다.

친박계는 결의안 마련 전에 비박계가 탄핵 찬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비박계는 탄핵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사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비박계 김무성·권성동 의원과 친박계 홍문종·윤상현 의원이 만나 결의안을 포함한 계파 갈등 극복 방안을 논의한 이후 일부 갈등이 표출되며 여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무성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모임과 관련해 ‘우리의 잘못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고 현재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총론적으로 인정하고 화해해 단결된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막아내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계 일각에서는 비박계의 탄핵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석방 촉구 결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명을 요구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비박계가 처음부터 (탄핵이라는)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석방 촉구 결의안은 사후약방문”이라고 비판했다.

친박계 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후안무치한 일은 처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김무성 의원은 탄핵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는 질문을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공방을 벌이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권성동 의원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찬성한 대로 이유가 있었고 반대한 사람은 반대한 이유가 있었다. 탄핵을 찬성한 건 보수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내달까지 현역 의원 직무 평가

2020년 총선 공천심사 활용... 컷오프 규정 삭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말까지 현역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내부 중간평가를 하기로 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가 주도하는 중간평가 결과는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직·간접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컷오프(공천 탈락) 관련 규정을 삭제한 점이다. 민주당은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공천심사 전 단계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중징 규정을 없애는 대신 평가 분야를 전보다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 임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평가 비중을 30 대 70으로 했으나,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

에 기준을 확정해 한 차례 평가만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기와 후반기 평가 비중을 45 대 55로 조정하고, 총선이 1년 5개월 남은 시점에 일찌감치 중간평가를 함으로써 공천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소통’을 위한 개별 의원의 노력도 주요 평가 지표로 내세웠다. 우선 당에 대한 기여활동 평가의 하나로 정책 토론회 실적, 공개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소통 실적, 각급 조직과의 소통 실적 등을 두루 체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성폭력, 음주운전, 금품수수, 채용비리, 갑질 등 이른바 ‘5대 비위’ 사건에 연루된 의원의 경우 공직윤리 수행실적에서 감점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꼬이고 꼬인 ‘예산 정국’

세수결손 등 5대 쟁점 입장차... 본회의 일정 합의 지연 3야 선거제 개혁 연계 방침에 회기내 처리 불투명

여야는 5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쟁점 예산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처리하자고 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전날부터 5대 쟁점 예산의 일괄 타결에 나섰지만, 뚜렷한 입장차로 협상에 진통이 계속되면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결손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장점으로 남겨진 상태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들은 이날 연쇄적으로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서도

감액 규모·사업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됐다.

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小)소위에서 감액한 1조4000억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 ‘깜깜이’ 남북협력 예산 등에서 모두 4조2000억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반영이 안 돼 서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4조원 세수 부족 문제도 다시 불거져 회동 장소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4조 세수 결손 대책은 전혀 없고, 결국 마지막 대책이 국회 발행인가”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꼬여버린 예산 정국을 타개할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중소 3당이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고 있어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자리, 남북협력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이라며 “오늘 합의가 안 되면 (협상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바른미래당 전남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정옥기씨

바른미래당 전남도당은 신임 사무처장에 정옥기 전 여수시의원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신임 정 처장은 여수 출신으로 바른미래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 처장은 “주승용 위원장의 운영방침인

당원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진정한 당원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전남도당은 이날 당사를 무안군 남야에서 여수로 이전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